

민주, 정의당 '김건희 특검' 신중론에 "국민 공분...빠른 결단을"

"50억 클럽만, 국민 납득 어려워"

"김 여사 의혹, 규명 아닌 은폐中"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쌍특검'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특검 성사를 위한 야권 연대 형성 차원에서 정의당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하고, 김 여사 특검은 검사들에게 맡기자고 하면 국민이 납득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 분노 또한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그동안 김 여사 특검 신중론을 폄하했지만, 우리 국민이 확인한 건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규명 아닌 진실은폐에 애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도적 다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 특검을 구성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이는 민주당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선고에 대해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무죄만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꼭 전 의원 무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법치주의에 대해 조롱을 넘어 허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 노동을 향해 날 선 칼을 들이대는 정권이 제 식구, 검찰 앞에선 녹슨 칼로 변하는 이중잣대 법치 현장을 매일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 더 이상 검찰에게 공정 수사를 기대하지 않는다"며 "50억 클럽을 포함한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 필요성을 말하고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에 대해 정의당 측 협력을 바란다는 목소리를 발신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정의당도 국민 생각을 결정에 담아야 하는데 미온적 부분은 아니다"며 "시간을 끈다고 있는 죄가 덮여지는 게 아니고 국민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또 "정치의 역할은 국민 개개인이 알 수 없는 일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빠른 결단을 통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 대변인은 대장동 특검에 관해선 "국회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50억 클럽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당도 발 빠르게 역할하겠다는 것

으로 알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저희도 동의한다"며 "절차와 과정은 야당 간 충실하게, 그간 해왔듯 논의를 통해 함께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이슬 기자

신민호 의원,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여순사건 아픔을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할 것" 강조

신 의원은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와 지급 시기, 예산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는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여순사건법)에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생존희생자에게만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째 접어들어 생존 희생자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유족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재정적 지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금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1만 천여 명에 이르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라며, "국

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호 의원은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2018년 7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방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여수 순천 10·19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유족회,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국회 계류 중인 여순사건법 제정을 지원해 2021년 6월 29일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여순사건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진상규명을 위해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에 방문해 건의하는 등 여순사건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박홍근, 與 주호영 "남탓·무대책 일관"

박홍근 쓴소리... "대책·비전 등 찾아보기 어려워"

"야당 공격하는 데 시간 쓰다보니 부족함 있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두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경청했다. 경륜 있는 의원으로서 국회와 국가에 대한 여러 염려와 걱정을 잘 전달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라면 현재 국민의 삶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 따라서 집권 여당·정부는 뭘 할지 대책, 비전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마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또 대통령의 여러 무능과 실정을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서 주로 여당이 야당과 협상해야 되는 위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을 비판, 공격하는데 시간을 쓰다 보니 그런 대책과 비전 제시하는데 부족함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에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을 보는 격이라고 느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뿔뿔히 찢어 쓸 수 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도왔고, 문재인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김재환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